

#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평등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으로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공공서울만들기지방선거네트워크 (담당 : 김윤진 민생경제팀 간사 02-723-5303,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현실적인' 정원오, '구체적인' 오세훈, '시급·필요한' 권영국  
날 짜 2026. 5. 28. (총 22 쪽)

## 보도자료

### '현실적인' 정원오, '구체적인' 오세훈, '시급·필요한' 권영국

공공서울넷, 60인 시민공약평가단의 서울시장 공약평가 결과 발표  
20~27일 노동·중소상인·의료·복지·주거·교통 등 사회경제 공약  
평가

정원오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오·김·권은 '돌봄복지'에서 좋은  
평가 공직선거법상 '점수'·'순위' 공개 못해 아쉬워, 유권자 알권리  
보장해야

1. 노동, 중소기업,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서울 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5/28) 100인의 시민공약평가단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한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평가에는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 중 60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약평가 설문양식을 통해 참여했으며, 4명의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의 노동·중소상인·의료·복지·주거·교통 등 6대 사회경제 정책공약을 직접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평가는 5월 20일까지 후보자들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발표한 공약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20일 이후 발표된 공약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이번 공약평가 결과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뿐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비교 평가하며 점수와 한줄평을 기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인물과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약평가 결과 각 후보자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정원오 후보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공약, 오세훈·김정철·권영국 후보는 ‘돌봄복지’공약이었고, 가장 좋지 못한 평가는 받은 공약은 각각 정원오 후보는 ‘보건의료’, 김정철 후보는 ‘주거부동산’, 오세훈·권영국 후보는 ‘교통’공약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별로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원오 후보와 김정철 후보는 공약의 현실성, 오세훈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 권영국 후보는 공약의 타당성(시급성·필요성)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부문별 네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균 점수는 ‘돌봄복지’공약(2.95)이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공약(2.84), ‘주거부동산’공약(2.83), ‘경제민주화·중소상인’공약(2.82), ‘보건의료’공약(2.81) 순이었고 가장 평가가 낮은 부문은 ‘교통’공약(2.69)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돌봄복지’ 부문의 경우 해당 공약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다른 공약과 비교해서 신선한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인지 묻는 ‘타당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3.04)를 받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교통’부문의 경우 이전 사례나 재원 등을 고려할 때 AI를 통한 교통혁신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도로 개발공약 등에서 현실가능성(2.55)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후보자별로 보면 정원오 후보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 노동 > 돌봄복지 > 주거부동산 > 보건의료 공약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원오 후보는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공약이 다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주거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은 높지만 그에 비해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의 경우 “상생협약 통해 임대료 폭등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정책”, “노선 및 위치까지 구체적이고 기후동행카드 통합 등 후보자들 중 가장 현실적 방안이 많음”,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된 것은 긍정적”, “AI 복지 자동신청·돌봄 다학제팀 등 행정 혁신과 서비스 통합을 잘 결합한 공약”,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후보자들 중 가장 균형 잡힌 공약으로 현실성과 구체성 모두 높다”, “소아 응급·간병 공백 해소라는 현실 문제를 잘 짚은 공약”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고, 반대로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불가능해 보임.”, “플랫폼·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이나 노동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 “선별주의를 넘어서지는 못함. 앞에 AI만 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님.”, “‘착착개발’이라는 카피라이팅 아래에서 밀려나가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상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정책은 응급·소아의료인데 문장마다 AI를 넣음. 설계도는 공공의료인데 포장지는 빅테크 마케팅임.”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4. 오세훈 후보는 돌봄복지 > 보건의료 > 주거부동산 > 노동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원오 후보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공약이 구체적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반면 공공의 책임보다는 민간중심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아 공약의 타당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확장한 생활밀착형 공약”, “응급실 컨트롤타워 확립 방향은 타당”, “대규모 공급과 재개발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현실형 공약”,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구체적”, “실천가능한 전략으로 이행가능성이 높음”, “대중교통 복지와 미래 교통 혁신을 함께 담음”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고,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공공이 직접 책임지려는 태도가 없음”, “공공병원 확충이나 의료 공공성 강화보다는 기존 체계 보완 중심에 머물러 구조적 의료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전체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청년 외의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노동권 보호나 불안정 노동 해소, 노동 안전망 강화 등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보이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정책 제도적 접근보다 현금성 지원 정책”, “배달앱 수수료 30~40%로 영업이익이 9%인 현실에서 디지털 채널 진입비용 300만원 지원은 플랫폼에 착취만 당하라는 것”, “실효성이 모호한 로보택시, 한강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을 했으면”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5. 김정철 후보는 돌봄복지 > 노동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보건의료 > 교통 > 주거부동산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철 후보의 경우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디테일한 공약을 통해 공약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철 후보의 경우 “성인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적절한 정책 타겟과 정책을 포함”, “청년 노동 권익 보호는 참신”, “상권 건강지수, 우리동네 마케터 등 데이터 기반 공약은 참신”, “타 후보에 비해 현실적인 제안”, “교통 정책이 구체적”, “원클릭 주거안전망 등 전세·월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방향은 옳음”이라는 좋은 평가와 함께, “자칫 AI서비스를 위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일어날 수 있음”, “중장년·고령 노동자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 “빛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적금 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 “공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금전지원 형식의 공약”,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분쟁

방지', '투명화' 이후에 뒤따르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짐.”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돌봄복지 > 주거부동산 > 노동 > 보건의료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교통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의 공약의 경우 실현을 위해서 임기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모호해 현실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타당성 부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경우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 “공공선매제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정책”,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4일제는 혁신적”,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간병비 공공보장은 서민 눈엔 가장 땡기는 공약”, “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가장 초점을 둔 공약”,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요금·이용 부담 완화,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통해 교통을 ‘이동권으로 보장’이라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 반대로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음”, “강북과 강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빅테크 이익 환수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서울시 권한 밖”,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빠졌다.”,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갑질 퇴출 등 공정거래 방향은 명확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규모 제시가 부족하다.”, “지하철 타보면 다 65세 이상이라,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아쉬운 평가도 있었습니다.

7. 공공서울넷은 이번 공약평가를 통해 시민공약평가단 참가자들이 짧게는 20분 많게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평가할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줄평을 통해 드러난 각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공약평가단 100명 중 60명이 실제 평가에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인데도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공서울넷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가 후보자별 점수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간 정책공약을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각 후보자가 낸 공약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정책공약이야말로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점수나 등급 방식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여 유권자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기계적 공정성을 이유로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관심을 막고 결과적으로 정책보다 정당과 인물 중심의 선거 문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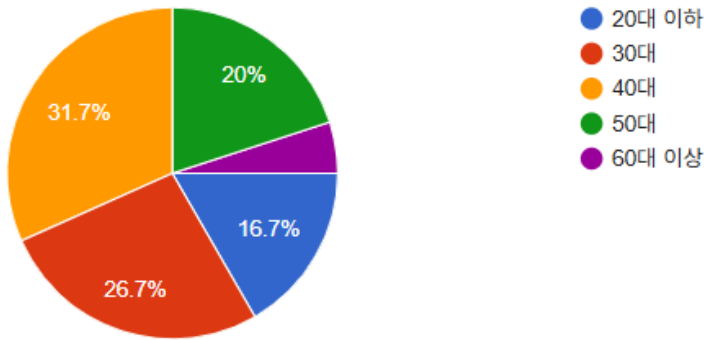
▣ 붙임자료 : 공공서울넷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공약평가 결과

▣ 붙임자료 : 공공서울넷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공약평가 결과

## 1. 평가개요

1) 평가단 구성 : 공공서울넷에서 모집한 시민공약평가단 100명 중 60명 참여

(1) 평가단의 연령대



(2) 평가단의 거주 및 주요 생활지역



## 2. 평가대상 공약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노동, 주거부동산, 돌봄복지, 보건의료, 경제민주화·중소상인, 교통공약
- 예비후보자등록기간 이후 각 후보자들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발표한 공약, 20일 전까지 공약집을 발표한 경우 그 내용 포함함

1)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정책공약

분야	구체적인 공약
노동	<p><b>[일한 만큼 제때 받는 노동존중 서울]</b> 서울시 발주·위탁·지원사업부터 임금체불 방지,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보수 미지급 예방 기준 마련, 서울형 프리랜서 권리현장 제정,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의 권리 보호</p>
	<p><b>[기술 변화에도 노동자가 함께하는 서울]</b> AI전환지원위원회 설치, 직무전환 교육·재교육 지원, 정의로운 전환 논의 체계 마련, 기후위험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p>
	<p><b>[노동자들의 시정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 적극 추진]</b> 서울 노동시민 100인 회의 설치, 정오클럽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재편 등</p>
주거부동산	<p><b>[착착개발로 2031년까지 주택 36만호 공급]</b>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 신축매입임대, 역세권청년주택, 청사복합개발 등을 통해 주택 36만호를 공급 (연간 7만호)</p>
	<p><b>[청년월세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b> 매년 5만 명씩 총 20만 명 청년에 1년간 매월 20만 원 월세지원, 신혼부부 실속형 분양주택(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1만호와 공공임대 3만호 공급, 청년주택(기숙사, 상생학사, 공공임대) 총 5만호 공급</p>
	<p><b>[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b> 투기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세대(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재산세 증가분 한시적 감면</p>
돌봄복지	<p><b>[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시니어 라이프캠퍼스’ 단계적 조성]</b> 배움과 건강관리, 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 거점 구축, 학년제 및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참여하는 캠퍼스 구축</p>
	<p><b>[살던 곳에서 누리는 서울형 통합돌봄 제공]</b> 돌봄 다학제팀을 중심으로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통합하여 지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와 낙상 예방 접수리, 제도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 돌봄재정 확대</p>
	<p><b>[AI 기반 복지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b>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의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 복지 행정 데이터 AI 분석으로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부터 자동 신청까지 한번에 이어지게 연결</p>

보건의료	<p><b>[24시간 빈틈없는 소아 진료체계 완성]</b> 달빛어린이병원 및 안심의원 확대, 서남권에 부족한 우리아이안심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 확충,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재추진</p>
	<p><b>[시민 건강 더하기]</b> 스마트 건강주치의로 혈당부터 만성질환까지 관리, 준비된 공중보건 의료대응체계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서울형 시니어 건강돌봄체계 구축</p>
	<p><b>[의료 사각지대 해소]</b> 서울형 응급재난 의료 지휘체계 확립으로 응급실 뱅뱅이 해결,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인력 확충으로 서울형 간병 체계 구축, <b>365일 24시간</b>, 사각지대 없는 우리아이 건강안심 서울</p>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p><b>[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b>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일용직·1인 자영업자 우선 지원, 산재보험·유급휴가 사각지대 보완,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p>
	<p><b>[물가대응]</b> 민관합동 경제위기 극복위원회 가동,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긴급 추경 검토, 에너지 바우처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적극 추진, 실시간 물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울시 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해 시민 체감도 향상</p>
	<p><b>[젠트리피케이션 방지]</b> 성수동에서 성공시킨 ‘상생 협약’ 모델을 서울 주요 상권에 도입해 임대료 폭등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p>
교통	<p><b>[서울시내 격자형 철도망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b> 동부선을 신설하여 균형있는 철도망 조성 (<b>419</b>묘지부터 수유-장한평-성수-청담-종합운동장), 멈춰있던 서부선,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위례신사선, 목동난곡선, 동북선 연장, 분당선 단선전철, <b>GTX-D</b>를 통해 철도연계성 강화</p>
	<p><b>[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b> 공공시설 무료셔틀, 소형 마을버스 등을 활용해 지역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교통소외지역 주민이 지하철역과 생활거점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p>
	<p><b>[기후동행카드를 모두의 카드와 통합하여 K-모두의기후동행카드 도입]</b>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전국으로 확대, 정액요금 미만(<b>62,000원</b>)은 일반교통카드로, 이상은 무료로 사용가능, K-패스와 연동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들에게 교통비 할인으로 환급</p>

##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정책공약

분야	구체적인 공약
노동	<p><b>【취약노동자 지원 확대·소규모 사업장 안전망 강화】</b>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장비·컨설팅·가이드 등 종합적인 안전 지원 체계 마련</p>
	<p><b>【심야근로 청년 교통·건강·안전 통합 지원체계 마련】</b> 올빼미버스(심야 시내버스) 노선 확대,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야간작업 특수건강 검진' 비용 등 연 1회 지원</p>
	<p><b>【야간근로 가정 위한 ‘심야 방문돌봄 서비스’ 도입】</b> 서울시 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야간근로자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 동안 저녁 식사 지원, 위생 관리, 수면·기상 관리, 야간 응급상황 대응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p>
주거부동산	<p><b>【압도적 주택공급, 신속통합 2.0】</b>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공급속도 향상(재개발·재건축 간소화, AI 활용한 교차 검증 사전 진행, 재개발 정채 지역 SH가 직접 진행 등), 강북 주거 개선 인센티브 6종 도입(성장잠재권 용도 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공공기여 부담 50→30%, 도심복합개발 특례, 허용용적을 20%→40%,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p>
	<p><b>【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b>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공공임대 12만 3천호, 공공분양 6천5백호, SH임대주택 1만호), 빌라·다세대 매년 1만호 건설 지원,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다세대 5년간 10만호, 보증금·대출이자·주거바우처 지원 확대, 월세지원 중장년 신설 및 청년 확대, 전세사기 위험 제로(전세안전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계약시 공인중개사 안심매니저 동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p>
	<p><b>【청년세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더드림집+】</b> 서울형 새싹 원룸 1만실 공급, 공유주택 6천호 공급, 대학캠퍼스 기숙사 1만1천실 공급, 디딤돌 청년주택 2천호 공급, 청년특화단지 1천호 공급, 코리빙하우스 5천호 공급, 청년안심주택 2.0 연 3천5백호 공급, 신혼부부 미리내집 매년 4천호 추가 공급</p>
돌봄복지	<p><b>【정정당한 노후 약속】</b> 방문진료 비요양등급자 본인부담금 80%지원, 장기요양 초기·재가 고위험군 생활 안정화를 위한 초기 물품 지원, 서울시 돌봄SOS 연간 이용한도 180만원 및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전액 무료, 연 15만개 공공일자리</p>

	<p><b>[더 촘촘해진 아동돌봄 지원]</b> 초등돌봄 시설 <b>130개 확충</b>(키움플러스+ 100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방학 점심 캠프, 정밀검사와 치료 위한 건강관리 바우처 연 <b>50만원 최대 2회</b> 제공</p>
<p>보건의료</p>	<p><b>[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완화]</b> AI 진료지원 확대 및 웨어러블 기반 실시간 생체모니터링 등 혁신의료기술 도입, 서울시 장학제도·졸업생 시립병원 의무근무제 및 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p>
	<p><b>[공공의료 인프라 확충]</b>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b>5개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소</b>로 확대, 권역 간 공공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거점 재배치</p>
	<p><b>[민관협력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b> 중증·희귀 심장·뇌혈관 질환 환자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마약 대응 표준 모델을 만들어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 임신·출산 분야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운영, <b>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b>, 달빛 어린이병원 증설, <b>20·30대 전용 암 검진 패키지 구성 및 검진 비용 10% 할인</b>, 시립병원 퇴원 후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결되는 통합 연계 체계 마련</p>
<p>경제민주화 중소상인</p>	<p><b>[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b> 디지털 취약기초 단계 : 디지털 전환 수준별 실습 교육 제공,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및 전략 수립, 디지털 전환 비용(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최대 <b>3백만원</b> 지원, 지속적 판매·마케팅 점검(<b>2년 사후관리</b>) / 성장·고도화 단계 : 홈페이지·배달앱·<b>SNS</b> 등 온라인 기반이 있는 업체 대상, 소셜 마케팅·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컨설팅 제공, 온라인 채널 효율화 및 신규채널 확대 지원</p>
	<p><b>[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3조원으로 확대]</b>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자영업자 안심통장' <b>5천억원</b>,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b>3천억원</b>, <b>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b> 피해 취약 사업자 금융지원 <b>4천억원</b>, 소상공인 실부담금리 <b>1.9~3.1%→1.7~2.9%</b></p>
	<p><b>[위기 소상공인 지원]</b> (위기단계) 모니터링 위기 징후 포착, <b>1:1</b> 맞춤형 경영진단 및 컨설팅 / (폐업·정리 단계) 폐업 절차·세무 신고·시설 처분 등 사업정리 컨설팅, 원상복구비 등 실비 최대 <b>3백만원</b> 지원 / (재도전·재창업 단계) 사업모델 재구성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재도전 자금 금융지원, 실비지원 최대 <b>2백만원</b></p>
<p>교통</p>	<p><b>[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결합한 서울기후동행패스 도입]</b> <b>70세 이상</b> 어르신 중 K-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월 <b>15회</b> 미만 이용자 교통비 <b>100%</b> 지원(연<b>525억원</b>), GTX-A, 신분당선 서울구간 기후동행패스 월 정액제 <b>6.2만원</b> 적용(연<b>350억원</b>), 기존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청년 연령 현행 <b>35세</b>에서 <b>42세</b>까지 연장, 한강버스-따릉이 연계 할인 등) 유지, 관광객 대상 단기권 별도 운영</p>

	<p><b>【하늘길 땅길 물길에서 만들어가는 미래교통혁신】</b> 교통 취약지역 및 심야 새벽시간에 부르면 달려오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버스(DRT) 도입, 24시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서울형 로보택시' (레벨4 자율주행 대상 확대, 강남 유료상용 서비스 시작), 한강버스 운영 안정화</p>
	<p><b>【이동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b> 지하철 역 10분내 환승 완성,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따릉이 성능 개선, 급경사 고지대 엘리베이터·모노레일 설치, 이동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100% 확대, 케데헌의 성지 남산 문턱을 낮추는 곤돌라 설치</p>

### 3)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책공약

분야	구체적인 공약
노동	<p><b>【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일한 기록'을 신용과 금융으로 연결】</b> 서울시가 구축 중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과 연계해 대출과 보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p>
	<p><b>【서울시 발주 사업에서 불법·불공정 고용 사업장 제재를 강화】</b>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미가입, 불법파견 등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 계약 배제, 보조금 제한 등 서울시 권한 내 제재를 강화 / 관계 기관과 연계해 익명 신고 및 조사 의뢰 체계를 구축</p>
	<p><b>【서울형 출산급여 플러스'를 신설】</b>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임산부 대상으로 소득 공백을 보완</p>
주거부동산	<p><b>【재개발·재건축·용적률 제도 개선】</b> 인허가 병목 해소 및 정비사업 처리 기한 의무 공개와 공공조합장을 통한 법적 분쟁 방지, 강남·강북·역세권·비역세권 용적률 적용 기준 전면 투명화</p>
	<p><b>【SH공사 개편 및 청년주택 확대】</b>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청년 주거 전문 공급기관으로 재편 및 역세권·대학가 청년주택 대폭 확대</p>
	<p><b>【임대인 제도 개선 및 원스트라이크 체계 구축】</b> 악성 임대인은 강력 제재하되 적법한 장기 임대 공급자는 제도권 공급자로 인정, 허위매물·신고가 조작·전세사기·불법중개에 서울시 차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체계 구축</p>
돌봄복지	<p><b>【AI 정밀 타겟형 복지 전환】</b> 단전·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를 자동 감지하고, 신청 없이 복지 서비스를 자동 연결, 디딤돌소득을 적립식으로</p>

	<p>재설계해 탈수급 시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복지를 자립의 사다리로 전환 / 18조 복지예산 효율화 재배분 (중복·실효성 부재 예산 전환)</p> <p><b>[신청주의 타파 찾아가는 복지]</b> 단전·보험료 체납·우편 미수령 등 위기 신호 데이터를 연동, 신청 없이 지원을 연결, 장애 등록·65세 도달을 자동 감지해 해당 서비스에 자동 연결 / 서울시 IT 행정 예산 재배분 (연 500~800억 수준), 수의계약 전환 및 복지 중복 지원 절감분으로 자체 재원 조달</p> <p><b>[1인 가구 지원 강화]</b> 1인가구 정책관(국장급) 신설 및 AI 통합관리, 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AI 시스템으로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며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 / 기존 복지·여성가족 예산 재편 내 흡수</p>
보건의료	<p><b>[소아과 오픈런 해소]</b>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가에 시 예산으로 회당 2만원 추가 지원, 서울 25개 구에 24시간 소아응급센터와 콜센터 구축</p> <p><b>[AI 기반 의료 서비스 도입]</b></p> <p><b>[공공의료 효율성 제고]</b></p>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p><b>[디딤돌소득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립전환 적금' 도입]</b>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칭 적립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p> <p><b>[소상공인 노사분쟁 지원]</b> 서울시에 노사분쟁 사전조정센터를 설치,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소상공인 전담 노무사 지원단을 구성, 출석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모바일·온라인 대응 시스템 구축, 무형의 확인 행정서 발급 및 대응 비용 일부 지원, 반복·악의적 신고 데이터 관리하고 서울시 공공사업 참여 시 불이익 반영</p>
교통	<p><b>[AI 신호·BRT로 교통 혁신]</b> CBTC 무선신호를 전면 도입하고, 9호선 우회 BRT(생생버스)를 신설해 AI 신호 개편으로 교통량 12% 개선</p> <p><b>[공공 지하공간 활용·주차개방 세제혜택]</b> 모든 공공기관 주차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교육청 협력)</p> <p><b>[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권 도입]</b> 우버 등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을 조례 개정과 국토부 협의 병행으로 제도화, 플랫폼 경쟁 확대로 심야·공항 구간을 자동 해소하고, 장애인 글로벌 표준 이동권 보장</p>

4) 정의당 권영국 후보 정책공약

분야	구체적인 공약
노동	<p><b>【민간위탁을 포함한 공공부문 산하 기관과 서울시장이 정기 노정교섭】</b> 공공부문부터 쪼개기, 불합리한 기간제, 무책임한 외주·용역 퇴출 신용보증재단 등 콜센터 직고용,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해고자 복직</p>
	<p><b>【빅테크 기업의 이익 환수로 ‘AI 전환기금’을 조성 일자리보장제 실시】</b> 기후와 돌봄 분야에서 생활임금, 4대보험, 교육 및 훈련 보장 일자리 창출,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 교육 및 소득 지원, 기술로 인한 노동조건 변화시 노정합의 필수화</p>
	<p><b>【주 4일제(주 35시간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도입】</b> 이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에는 전환지원금 제공,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p>
주거부동산	<p><b>【공공임대주택 20% 확보】</b>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과 매입 양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토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는 원칙으로 용산 정비창, 수서역 공영주차장, 은평 혁신파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 매물·노후주택·공가·역세권 주택 우선 매입. 이를 위해 공공선매제 도입</p>
	<p><b>【서울형 표준 임대료제 도입,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한시적 동결】</b> ‘서울형 표준임대료’와 ‘표준관리비’를 조사·공표. 이를 활용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 관리비 인상을 통한 꾀수 임대료 상승 제한.「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조례」제정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차 분쟁조정 강화, 계약갱신 지원을 통해 세입자의 계속주거권 보장</p>
	<p><b>【노후주택을 에너지효율 녹색주택으로 수리지원】</b>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오래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자가 및 세입자 모두 포함)에게 도배, 장판, 방수, 곰팡이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집수리 바우처’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되, 수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상생 협약</p>
돌봄복지	<p><b>【돌봄의 사회화】</b>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서울간병지원센터를 설립,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충, '서울형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 강제 폐지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복원</p>
	<p><b>【아동 돌봄】</b> : 학교와 서울시가 함께 공공 아동돌봄체계를 확대, 아동 병원비 상한제를 실시, 누구나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서울에서부터 실현</p>

	<p><b>[어르신 돌봄]</b> : 모든 자치구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 서울 공동체 속의 노후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대폭 확충,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식사 공동체를 지원</p>
보건의료	<p><b>[서울형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b> : 아동·청소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서울시가 지원. 이후 어르신, 중증·만성질환자, 저소득 가구, 전 시민으로 대상을 단계적 확대</p>
	<p><b>[만성질환 관리비와 필수 약값 지원]</b> : 고혈압·당뇨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와 필수 약값 지원, 어르신부터 시작하여 대상을 확대, 보건소, 동네의원, 시립병원을 연결해 정기검진·복약관리·생활습관 상담을 지원.</p>
	<p><b>[간병비 공공 보장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b> :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고 민간영역까지 확대,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도 입원 환자가 필요한 간호와 일상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지원.</p>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p><b>[공정거래 확산, 중소기업 보호]</b> '납품단가 연동제'지역 안착(지방세 등 인센티브), 하도급 갑질 기업은 공공조달에서 영구 퇴출 및 분쟁조정센터 운영, 플랫폼 갑질 근절 및 서울형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프랜차이즈 불공정 마진 타파 및 '자주적 공동구매' 전면 지원, 대형 상업시설 '골목상권 영향평가' 의무화</p>
	<p><b>[백년상권 보장]</b>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협약 구역'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지역 자산화 지원, 장기 자영업자 '희망주택' 및 청약 가점 부여</p>
	<p><b>[자영업 안전망]</b> : 코로나19 '잃어버린 6개월' 소급 보상, 영세 소상공인 '가계 유지 지원'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고용·산재·상병) 구축, 소상공인 특화 '생활금융주치의' 상담</p>
교통	<p><b>[대중교통 무상화 단계적 실시]</b>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부터 대중교통 요금 '0원'을 우선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 시민으로 확대</p>
	<p><b>[서울시 버스 완전 공영제 전면 도입]</b> : 사모펀드의 배당 잔치로 전략한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직접 노선을 소유·운영</p>

**[호출비 0원 공공 택시 및 이음버스 도입]**: 중개 수수료와 호출비 없는 '서울시 공공 택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골목 사각지대를 잇는 친환경 '우리동네 이음버스'를 도입

### 3. 공약평가 방법

- 시민공약평가단은 각 후보자의 공약을 6개 부문별로 나눠 비교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구체성, 현실성, 타당성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각각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 사이에서 점수를 배정함. 아울러 각 부문별 공약평가 마지막에는 한줄평을 적시함.
- 예시) 정원오 후보의 노동 공약 평가 양식

<p><b>정원오 후보 노동 공약의 구체성 *</b></p> <p>정책의 도입계획이나 내용, 수치, 자원마련방안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가</p>						
	1	2	3	4	5	
추상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체적
<p><b>정원오 후보 노동 공약의 현실성 *</b></p> <p>정책이 이전 사례나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현실가능한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p>						
	1	2	3	4	5	
비현실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현실적
<p><b>정원오 후보 노동 공약의 타당성 *</b></p> <p>정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다른 공약과 비교해서 신선한가.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인가.</p>						
	1	2	3	4	5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타당함

#### 4. 평가결과

\* 한줄평의 경우 전체 내용 중에서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각각 3개씩 선정함

순위	부문	한줄평	내용
1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좋은 점	<p>“취약계층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 정책 필요함”</p> <p>“상생협약 통해 임대료 폭등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정책”</p> <p>“성동구 검증모델 확산 전략으로 현실성이 가장 높고 생활밀착형 세부 공약도 풍부”</p>
		아쉬운 점	<p>“개혁성에서 다소 미흡함”</p> <p>“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p> <p>“기후위기나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음.”</p>
2	교통	좋은 점	<p>“대중교통 중심 전환과 보행 친화 도시 조성,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는 될 수 있음”</p> <p>“교통의 공공성, 생태를 생각하는 관점이 보임”</p> <p>“노선 및 위치까지 구체적이고 기후동행카드 통합 등 후보자들 중 가장 현실적 방안이 많음”</p>
		아쉬운 점	<p>“격자형 철도망 이외 지역과 부동산 양극화도 생각해야함”</p> <p>“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불가능해 보임.”</p> <p>“대중교통 공약은 결국 공공적 이동에 대한 단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장애인 관련 공약이 하나도 없음”</p>
3	노동	좋은 점	<p>“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폭넓게 담아냄”</p> <p>“‘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된 것은 긍정적”</p> <p>“AI전환위원회 설치가 돋보임”</p>
		아쉬운 점	<p>“검증된 현장 경험 기반의 구체적 공약이나, 핵심 과제 상당수가 중앙정부 입법에 의존”</p> <p>“플랫폼·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이나 노동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p> <p>“‘AI 전환위원회’ 등 현실성이 매우 부족”</p>
4	돌봄복지	좋은 점	<p>“현실적인 돌봄복지정책임”</p> <p>“통합돌봄 서비스 공약이 인상적”</p> <p>“AI 복지 자동신청·돌봄 다학제팀 등 행정 혁신과</p>

			서비스 통합을 잘 결합한 공약”
		아쉬운 점	<p>“돌봄은 예산과 지원, 인프라 구축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모호함”</p> <p>“노인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인가구나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짐.”</p> <p>“선별주의를 넘어서지는 못함. 앞에 AI만 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님.”</p>
5	주거 도 부동산	좋은 점	<p>“주거문제를 공공이 나서서 한다는 점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함.”</p> <p>“주거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공약이라 생각함”</p> <p>“주거부동산 공약에서 후보자들 중 가장 균형 잡힌 공약으로 현실성과 구체성 모두 높다”</p>
		아쉬운 점	<p>“끝없이 치솟는 집값대책이 보이지않고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공약”</p> <p>“‘착착개발’이라는 카피라이팅 아래에서 밀려나가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상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p> <p>“현실성이 있어서 무서운 공약들. ‘주거권’을 잠잘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된다고만 여기는 듯”</p>
6	보건의료	좋은 점	<p>“실제 서울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공약”</p> <p>“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방향성은 옳다.”</p> <p>“소아 응급·간병 공백 해소라는 현실 문제를 잘 짚은 공약”</p>
		아쉬운 점	<p>“응급의료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을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은 다소 낙관적. 설립 이후 재정 지원이나 관리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p> <p>“정책은 응급·소아의료인데 문장마다 AI를 넣음. 설계도는 공공의료인데 포장지는 빅테크 마케팅임.”</p> <p>“보건의료정책이 단편적이고 전반적인 의료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p>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순위	부문	한줄평	내용
1	돌봄복지	좋은 점	“방학 기간동안 점심캠프 운영하는 방안이 좋음” “기존 돌봄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확장한 생활밀착형 공약”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간병, 돌봄지원은 좋다고 생각함”
		아쉬운 점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공공이 직접 책임지려는 태도가 없음” “‘SOS’는 이제 그만, 일상돌봄이 필요함” “기존 정책의 확대에만 머물러있으며, 공공돌봄 구조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짐.”
2	보건의료	좋은 점	“생활밀착형 의료 지원은 강화” “응급실 컨트롤타워 확립 방향은 타당” “할 수는 있어 보임”
		아쉬운 점	“제한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구체성, 실효성이 모호하게 느껴지고 구체적 투자계획도 없음.” “공공병원 확충이나 의료 공공성 강화보다는 기존 체계 보완 중심에 머물러 구조적 의료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의료보건정책이 단편적이고 의료 보건수준향상에는 미흡함”
3	주거부동산	좋은 점	“대규모 공급과 재개발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현실형 공약” “구체적 수치를 제시” “전세사기 관련 공약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
		아쉬운 점	“전체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청년 외의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도시생태계 고민이 부족한 개발 중심 부동산 정책이며 실현가능성이 미흡함”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위험 제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4	노동	좋은 점	“취약노동자 지원이라는 생활밀착형 접근은 의미 있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구체적” “올빼미버스 확대는 야간 노동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 긍정적.”

		아쉬운 점	<p>“단순히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해당하는 대상들의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p> <p>“노동권 보호나 불안정 노동 해소, 노동 안전망 강화 등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보이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정책 제도적 접근보다 현금성 지원 정책”</p> <p>“야간노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짐”</p>
5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좋은 점	<p>“실천가능한 전략으로 이행가능성이 높음”</p> <p>“체질 개선 필요성에 공감”</p> <p>“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전환 비용 지원은 좋다”</p>
		아쉬운 점	<p>“기존 정책의 연장형 공약이 많고,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은 국회 사안으로 실현여부가 불투명”</p> <p>“배달앱 수수료 30~40%로 영업이익이 9%인 현실에서 디지털 채널 진입비용 300만원 지원은 플랫폼에 착취만 당하라는 것 ”</p> <p>“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빚을 더해주겠다는 대책.”</p>
6	교통	좋은 점	<p>“대중교통 복지와 미래 교통 혁신을 함께 담음”</p> <p>“전반적으로 무난”</p> <p>“미래지향적인 정책”</p>
		아쉬운 점	<p>“실효성이 모호한 로보택시, 한강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을 했으면”</p> <p>“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나 보행·자전거 중심 전환 같은 지속가능 교통 정책 비중 약함. 한강버스는 효율성도 효과 불분명”</p> <p>“강북전성시대기금 등 무려 9.2조에 대한 자원 조달 방법이 없고 자율주행 실현 시기도 불확실”</p>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순위	부문	한줄평	내용
1	돌봄	좋은 점	“신청주의 타파에는 공감” “임산부 교통바우처·맘편한 놀이방 등 공약은 참신” “성인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적절한 정책 타겟과 정책을 포함”
		아쉬운 점	“돌봄 공공성 확대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적 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부족” “위기 가구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통합 돌봄은 시대적 과제” “자칫 AI서비스를 위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일어날 수 있음”
2	노동	좋은 점	“취약노동자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짚음” “특수고용자의 경력이 일정치 않아서 경력 시스템에 연계해 금융기관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은 좋음” “청년 노동 권익 보호는 참신”
		아쉬운 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일한 기록을 신용과 금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공약은 전혀 노동정책으로 느껴지지 않음. 현실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더 심각한 문제들(임금미지급, 노동권 보장 등)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느낌.” “출산급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중장년·고령 노동자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
3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좋은 점	“상권 건강지수, 우리동네 마케터 등 데이터 기반 공약은 참신” “구체적인 정책”
		아쉬운 점	“빛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적금 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 “특정 센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정책 제안은 시장 공약으로 부적합” “지역화폐 개편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
4	보건의료	좋은 점	“현실적 예방 중심 접근” “소아 의료 공백 해소에는 실질적 접근”

			“타 후보에 비해 현실적인 제안”
		아쉬운 점	<p>“모든 공약에 AI 접목 시스템 구축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남용이 우려됨”</p> <p>“공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금전지원 형식의 공약”</p> <p>“공공 구조의 개혁이 아닌 민간 의료의 협업에만 집중. 전체 시민 건강 격차·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략은 빈약.”</p>
5	교통	좋은 점	<p>“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타당함”</p> <p>“교통 정책이 구체적”</p> <p>“지하 공간 활용은 좋음”</p>
		아쉬운 점	<p>“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 부족”</p> <p>“광역 교통망 확충이나 교통 수요 관리, 탄소중립형 교통 전환 같은 구조적 과제에 대한 구체성 부족”</p> <p>“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p>
6	주거부동산	좋은 점	<p>“약성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납득 가능”</p> <p>“임대료에 관한 공약은 좋음”</p> <p>“원클릭 주거안전망 등 전세·월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방향은 옳음”</p>
		아쉬운 점	<p>“SH 재편 방향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음. 청년만 주거취약계층인 건 아님.”</p> <p>“전세사기, 임대차 문제는 임대인 개인을 아웃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보증보험확대, 매매가와 전세가 등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수많은 원인이 있음”</p> <p>“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분쟁 방지', '투명화' 이후에 뒤따르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짐.”</p>

정의당 권영국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순위	부문	한줄평	내용
1	돌봄복지	좋은 점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천만 도시, 서울을 돌볼 도전과 혁신의 공약”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
		아쉬운 점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음” “취지는 좋으나, 서울시의 환급 지연이나 심사 삭감으로 인해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가장 진보적이라 불리는 후보조차 돌봄에 대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게 서글픔”
2	주거부동산	좋은 점	“시민의 삶에서 길어 올린 '필요'에 기반한 공약들” “노후주택을 녹색주택으로 수리지원한다는 공약은 기후위기와 ESG 측면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음” “공공선매제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정책”
		아쉬운 점	“계속거주권의 경우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강북과 강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상적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인식과 괴리감은 현실성이 떨어짐”
3	노동	좋은 점	“당선만 되신다면 서울시의 노동환경이 세층 업그레이될 것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복직 등 꼭 필요하며 서울시장이 해야만하고 가능한 일들을 공약에 명시한 점은 긍정적임.”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4일제는 혁신적”
		아쉬운 점	“빅테크 이익 환수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서울시 권한 밖” “전반적으로 적합하나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동의하나 서울시 수준에서 추진가능한지 모호”

4	보건의료	좋은 점	<p>“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있으나, 방향이 너무나 옳음. 만성질환관리비와 필수 약값지원 부분이 특히나 마음에 듦. 모두를 포괄하는 거 같아서 좋음.”</p> <p>“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간병비 공공보장은 서민 눈엔 가장 땡기는 공약”</p> <p>“공공병원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돌봄과 건강권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p>
		아쉬운 점	<p>“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빠졌다.”</p> <p>“전문간호 인력이 얼마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이 듦”</p> <p>“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계획 필요”</p>
5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좋은 점	<p>“타 후보에 비해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짐.”</p> <p>“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가장 초점을 둔 공약”</p> <p>“정책방향은 후보들중 가장 완벽”</p>
		아쉬운 점	<p>“가장 진보적인 정책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함”</p> <p>“공공의 역할은 하겠지만, 입법이 많이 필요해보임”</p> <p>“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갑질 퇴출 등 공정거래 방향은 명확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규모 제시가 부족하다.”</p>
6	교통	좋은 점	<p>“교통수준 향상에 구조적 개혁정책”</p> <p>“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만 있다면 좋은 공약 ”</p> <p>“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요금·이용 부담 완화,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통해 교통을‘이동권으로 보장”</p>
		아쉬운 점	<p>“재원조달 대책이 없어 사업추진 불투명”</p> <p>“지하철 타보면 다 65세 이상이라,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p> <p>“서울시 대중교통 비용은 공공적 관점에서 충분히 낮은 상태라고 생각함”</p>